

청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에 관한 소고*

하 승 미**

I.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0여년간 수순 문화예술활동 참가율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게 있어서 더 큰 감소세를 보여 왔다.¹⁾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예술행사 관람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가구소득 500만원대 이상의 관람률이 83.5%로 100만원 미만 가구의 관람률 26.9%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²⁾ 문화예술 양극화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 정책에 대한 중요도 조사에서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외계층을 위한 여가생활을 지원해야 한다.’가 70.2%로 가장 높게 나왔다.³⁾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이 단순 특권이 아닌 인간으로써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가능한 것이다. 즉, 국민들은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의 혜택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비장애인 대비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장애인의 입장은 더욱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⁴⁾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 하지만 장애인은 경제적 이유 외에도 더 큰 이유가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장애인에 대한 문화정책의 미비로 문화를 즐길만한 기회 자체가 적다는 것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극히 드물며 장애인을 위한 이동 및 접근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접근상의 불편이 아닌 듣고 말

* 투고일자 : 2015. 5. 10 심사일자 : 2015. 6. 10 게재확정일자 : 2015. 6. 18

** 대구대학교 직업재활 박사, 고신대 외래교수, 전. 대구농아인협회 사무국장

1) 김세훈, 「문화양극화 대응 중기 계획 연구」, 2006, p.12

2) 문화체육관광부,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 2012, p.41

3) 문화체육관광부, 「2012 국민여가활동조사」, 2012, p.232-233

4) 15세 이상 장애인 중 취업장애인은 34.12%, 취업장애인 중 상용근로자는 23.5%,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수입은 약 115만원(하승미, 청각장애인 고용의 질에 관한 비교 연구, 대구대학교 재활과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3, p.1-2)

하는 어려움, 수화라는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동일한 방식으로 문화예술을 표현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많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권으로써의 문화향유권을, 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인권의 개념과 분류

1. 인권의 개념

인권(人權, Human Right)은 인간의 권리를 줄인 말로 인간과 권리의 합성어로 ‘인간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⁵⁾ 보통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정의된다. 이러한 인권은 ‘존엄성을 지니고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고 이는 침해될 수 없고 양도할 수도 없는 권리’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인권의 개념을 법적으로 살펴보면,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권을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는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헌법보다 다소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다양한 인권 개념들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바로 인간의 존엄이다. 즉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무시하는 것이며, 인간의 존엄을 무시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을 위해하는 행위이다. 다만 인간의 존엄은 개인의 존중을 포함하지만 개인의 존중만으로 인간의 존엄을 설명할 수는 없다. 인권은 각 나라마다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인권의 보편성과 권리개념이라는 측면에서 누구나 당연히 인권의 주체가 된다. 이는 특별히 사회적 약자라고 칭해지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인권을 별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인권의 주체로서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때문에 오늘날 인권은 국

5) 권혁장, 인권의 이해, 2014 장애아카데미 장애인인권강사양성과정, 2014, p.26

제사회에서 상식 또는 일상어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인권은 보편성, 상호의존성 및 상호연관성을 가져야 하고, 누구에게도 차별 없는 평등⁶⁾과 자유를 근간으로 한다. 또한 인권은 소수자⁷⁾를 보호함을 원칙으로 하며, 권리 간의 충돌과 인권 원칙에 따른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인권의 기본적인 원칙을 기준으로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다.

2. 인권의 분류

인간의 권리인 인권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어디까지가 인권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유엔에 의해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1968년 채택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⁹⁾은 지금까지 국제 사회가 합의한 인권의 보편적 기준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 국제인권장전¹⁰⁾에 따른 인권의 분류

인권의 분류	개별 인권의 내용
경제적 권리	1. 적절한 생활수준을 획득하고 유지할 권리 : 배고픔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사회권 11조 2항), 적절한 식량 의복 주거를 포함하는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사회권 11조 1항) 2. 노동권(사회권 6조)

6)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차별을 보다 상세히 규명하고 있는데 제30조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병력의 18개를 종류를 언급하고 있다.

7) 소수자 : 인구학적으로는 일정 지역에 밀집해서 살고 있어서 종족적으로, 민족적으로,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해당 사회의 지배적인 유형과 성격을 달리 하는 집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수적 규모의 적음보다 구별성, 차별성, 종속성 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김하수, 조태린, ‘한국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한국사회 언어학회 학술대회, 2007).

8)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ICESCR)

9)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ICCPR)

10) 1946년의 인권장전 초안과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1966년의 국제인권규약을 합쳐 국제인권장전이라고 부르기도 함

	3.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사회권 7조) 4. 노동조합을 형성하고 가입할 권리, 파업할 권리(사회권 8조)
사회적 권리	1.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사회권 9조) 2. 가족, 임신부, 아동의 권리(사회권 10조) : 가족에 대한 보호, 혼인의 자유 (자유권 23조), 아동의 권리(자유권 24조) 3.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사회권 12조)
문화적 권리	1. 교육권 (사회권 13조) : 기초의무교육에 대한 권리(사회권 14조) 2. <u>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자유로운 과학적 진보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사회권 15조)</u> 3. 소수자의 권리(자유권 27조)
시민적 권리	1.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자유권 16조),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자유권 10조) 2. 채소자의 권리 생명권(자유권 6조), 고문금지(자유권 7조), 체벌제도의 기본적 원칙(자유권 10조) 3.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재판 앞에 평등과 무죄추정의 원칙(자유권 14조), 계약상 의무의 불능만을 이유로 구금금지(자유권 11조) 4.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자유권 12조) 5.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개인적 영역(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보호(자유권 17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자유권 19조), 전쟁과 차별에 대한 선전 금지(자유권 20조)
정치적 권리	1.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자유권 21조) 2. 결사의 자유(자유권 22조) 3. 정치에 참여할 권리(자유권 25조)

국제인권장전이 담고 있는 인권의 범주에는 적절한 생활수준에서 정치에 참여할 권리까지 다양하며 이 가운데에는 문화적 권리 영역에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자유로운 과학적 진보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도 있다. 즉, 문화향유권은 인간의 당연한 권리인 인권인 것이다.

III. 인권으로써 문화향유권

1. 문화향유권

일반적으로 문화예술활동¹¹⁾을 직·간접적으로 하고 문화생활을 즐기고 여가 및 스포츠

등에 참여하는 것을 문화를 향유한다고 말하며, 문화향유권이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직업을 갖고 일하고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외에 창조적이고 삶을 보다 여유롭고 만족스럽게 하는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독특한 욕구이다. 때문에 문화를 향유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참여와 간접적인 참여를 모두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국제사회에서 문화적 기본권에 대한 언급은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에 그 기초를 두며, 제27조에서 문화적 권리에 대해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권은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양식들을 보호하고, 문화가 다양한 영역으로 발전하고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몇몇 문화예술 생산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수용자의 권리를 포함하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문화향유를 위해 필요한 각종 문화적 생산수단을 공적으로 확보하고, 문화적 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환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¹²⁾

2. 문화예술 소외계층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문화향유에 대한 권리를 명문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제10조와 제11조 1항 등에서 국민이 문화적 생활을 누리는데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국민 가운데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존재한다.

문화예술진흥법¹³⁾은 문화소외계층을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계층으로 정의한다.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11)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함

12) 김세훈,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2005, p.17

1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13.8.6] [법률 제11901호, 2013.7.16., 일부개정] 제15조의 3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표 2> 문화소외계층의 정의

구분	문화소외계층
경제적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거주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	장애인 , 노인, 재활원·보육원 등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등
지리적 소외계층	농어촌, 도서(섬), 산간 벽지 및 공단 지역 주민 등

한편 전정운¹⁴⁾은 문화적 소외계층이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문화와 예술을 영위할 기회가 극도로 미비하거나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해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특별한 형태의 문화적 수혜를 필요로 하는 계층이라고 정의하여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과 달리 경제적,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정부의 기준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문화향유 지원 사업이 있다. 우선 경제적 소외계층인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스포츠바우처, 스포츠관람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소외계층인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장애인용 대체자료제작 및 보급, 장애인 대상 도서대출 서비스,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장애인 예술 창작역량 강화,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 이주청소년 문화감성 증진, 다문화가정새활체육 지원, 저소득층 지식정보 활동 지원, 지방문예회관 프로그램 지원, 공공박물관·미술관 전시 지원,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종교계 소외계층 문화향유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세대별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과 기부와 나눔 활동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¹⁵⁾

문화예술 소외계층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계층별 수를 알아보면, 우선 경제적 소외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거주자 등으로 정의한 바, 우리나라에는 2011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157만명, 차상위계층 약 170만명으로 327만명(170만 가구)로 파악된다.¹⁶⁾

하지만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¹⁷⁾, 노인 등의 수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소외계층은 여러 가지 환경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단순히 노인, 장애인 등

14) 전정운, 「e-Learning을 활용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교육 방안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안산, 2009, p.11

15) 문화관광부 보도자료(2012. 3. 29) 재구성

16) 조현성, 2011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평가 연구, 2012, p.27

17) 추정 장애인 수는 약 270만명,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50만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장애인실태조사, 2014)

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약 44%가 노인인 점 등을 볼 때, 노인이면서 저소득, 장애인이면서 노인 등 여러 가지조건들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노인이라고 반드시 문화적 소외계층이라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다.¹⁸⁾ 지리적 소외계층 또한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만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없는 계층보다 경제적 소외뿐 아니라 사회적, 지리적 환경까지 동시에 있는 경우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줄어들기 때문에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소외계층이면서 경제적 상황도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은 더욱 불리한 위치에 있다. 특히 물리적 접근이나 소통의 이질까지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라면 더욱 문화예술과의 거리는 멀다고 할 수 있다.

IV.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1. 장애인 문화향유권의 법적 근거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예술진흥법이 정의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 중 장애인은 사회적 소외계층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회적 문화소외계층인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은 장애인권리협약 채택,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언급하고 있다.

우선, 「세계인권선언」 제27조는 모든 사람들이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학문적 진보와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문화향유를 위해 필요한 각종 문화적 생산수단의 공적확보와 그러한 문화에 대한 접근성확보라는 국가적 의무를 내포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에는 장애인을 비롯한 문화소외계층도 포함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헌법 제11조 1항에서 “누구든지 성별·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평등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으로 1998년 제정된 장애인인권헌장 제7조에서는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에서는 ‘문화활동 참여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

18) 김세훈,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2005, p.17

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강요 금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문화예술시설 이용 등에 대한 시책 강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장애인의 문화향유를 위한 지원 사례

그간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 마련을 해왔지만 일반(비장애인) 문화예술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07년 '예술인 실태조사'¹⁹⁾에 의하면 장애인 예술가들은 평균 17.3시간의 예술창작활동을 하고 있으며 창작활동과 관련된 월평균 수입은 대부분 없거나(69.3%) 10만원 이하(12.8%)로 나타났고, 창작활동과 관련된 월평균 지출은 10만원 이하(44.4%)이거나 없는 경우(19.6%)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적 부담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가로막는 이유에는 경제적 부담 외에도 많다. 한마디로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극히 미비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좌석이 지정석이 아닌 자유석인 영화관이나 공연장을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²⁰⁾, 장애인석은 사전 온라인 예매도 되지 않아 현장에서 줄을 서서 구매해야 하며, 극장 마다 장애인석이 몇 석 되지 않은 탓에 다른 장애인이 먼저 오면 좌석 부족으로 영화를 볼 수 없어 휠체어를 타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 사태까지 생긴다. 또한 한국영화 정규 개봉작 가운데 한글자막을 삽입하거나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는 없다.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여행을 할 경우도 관련 여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미비하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문화예술향유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장애인 등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미국장애인법(ADA)에 의해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제공되고 있다. 특히 뉴욕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 Theater Access Project(TAP)는 6,000명의 장애인들에게 공연 관람이 편리한 좌석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뉴욕주예술평의회와 협력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및 자막 공연 제작에 보조금을 지원하

19)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예술인 실태조사, 2007

20) 지정석 : 주로 영화관 맨 뒤쪽 출입구 바로 앞에 1-2대의 휠체어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뿐 개인의 욕구에 따라 영화관 앞, 왼쪽, 오른쪽 등 자유로운 자리 선택이 불가능함.

고, 장애인들이 극장을 방문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는 프랑스장애인재적응연계위원회(CNFLRH)에서 장애인의 문화생활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프랑스장애인문화협회(APF)에서는 안내자가 동반된 여행이나 탐방활동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있고 프랑스장애인음악협회는 장애를 가진 성인 및 아동이 합창이나 관현악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음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여행자협회에서는 장애인과 동행하기 위한 유료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장애인용 종합이용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와 민간봉사단체가 협력하여 무료 또는 저가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V. 청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

1. 청각장애인의 문화향유 실태

청각장애인은 여타의 장애인이 물리적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를 향유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과 달리 내용을 전달받을 수 없는 보다 본질적인 어려움으로 안고 있다. 물론 경제적 어려움은 비슷하다. 때문에 청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은 내용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것과 관련된 모든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청각장애인 가운데 특히 수화를 사용하는 농인(Deaf)은 소수집단(minority)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들이 자신의 언어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 하지만 아직 청각장애인을 위한 분야는 방송, 약간의 영화, 약간의 연극, 약간의 문화해설, 미술, 사진으로 국한되고 있다. 청각장애인은 듣지 못한다는 신체적인 특성 때문에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받고 있고 이는 문화시설의 접근이나 콘텐츠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다.

가. 방송

방송(텔레비전)의 경우 청각장애인에게 과거에 비해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지만 기존 매체를 사용한 뉴미디어 접근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자막방송의 경우, 지상파방송은 자막방송 비율이 90%를 넘어서고 있지만 위성방송이나 케이블방송은 자막방송을 거의 실시하고 있지 않다. 수화방송의 경우도 지상파방송 중 수화통역방송 비율은 방영시간 대

비 4%내외에 불과하며 편성시간 역시 시청률이 1% 미만인 비인기 시간대에 주로 편성하고 있다²¹⁾. 라디오는 완전 배제된 상태이다.

나. 영화(배리어프리 영화)

청각장애인은 한국영화를 볼 수 없다. 다문화가정이 늘어감에 따라 한국영화를 영어로 자막처리하지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태초부터 함께 살아온 자국민인 청각장애인은 한국영화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회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농아인협회는 오랜 노력 끝에 2005년부터 배리어프리 영화²²⁾를 상영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상영관, 상영작, 상영시간대가 다양하게 늘어가고 있지만 한국영화 상영작 무엇이든,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보고 있는 청인²³⁾과 비교할 때 청각장애인은 아주 제한된 조건에서만 영화를 보고 있다.

한국농아인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영화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은 2014년 현재 전국 31개소의 극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²⁴⁾ 2005년 2개관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전국 292개의 극장에 1,974개의 스크린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아주 제한된 장소에서만 청각장애인이 한국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배리어프리로 제작된 영화는 2006년 10편, 2007년 15편, 2008년 13편, 2009년 9편, 2010년 8편, 2011년 7편, 2012년 10편, 2013년 15편, 2014년 7편 총 95편이었다.²⁵⁾ 2015년 5월 한 달 간 개봉예정인 한국영화가 10편을 넘는 것과 비교할 때 청각장애인이 만날 수 있는 한국영화의 비율은 매우 적다. 더불어 우리나라 영화시장의 2011년 한해 관람객 수가 162,366,913명²⁶⁾인(1인당 3.2편 관람) 반면 2011년 청각장애인의 한국영화를 관람한 수가 6,138명(전국 27만 명 중 0.022%)에 불과하다.

21) 대구의 경우, KBS대구방송 오전10시 뉴스와 저녁7시20분 뉴스, MBC대구방송 오전10시 뉴스, TBC대구방송 12시30분 뉴스, 저녁6시 뉴스 로 비인기 시간대의 단신 위주의 뉴스만을 수화로 제공하고 있음

22) 배리어프리 영화 :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권 강화를 취지로 한글자막(청각장애인)과 화면해설(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영화. 2005년-2007년 영화단체지원사업(정책사업)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시범사업 시행 → 영화진흥사업 근거. 2005년 4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심의결과와 협의하여 예산부족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산업진흥과에서 국고 예산 편성 → 한국농아인협회 위탁

23) 청인(廳人)은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의 반대 개념으로 들리는 사람

24) 문화관광부, 영화문화 향유권 강화를 통한 지역문화 연구, 2012, 12, p.4

25) 한국농아인협회, ‘배리어프리 영화’ 내부자료, 2014

26) 문화관광부, 영화문화 향유권 강화를 통한 지역문화 연구, 2012, 12, p.10

<표 3> 2014년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관²⁷⁾

구분	극장명	지역명	비고
2014 년	(주)CJ, CGV	구로, 강변, 인천, 북수원, 평택, 안산, 원주, 제주, 아시아드, 창원더시티, 구미, 대구현대, 울산삼산, 대전, 순천, 전주, 천안, 청주터미널, 광주터미널	19개소
	롯데시네마(주)	라페스타, 부천, 목포, 보령, 포항, 성남, 전주 등(유기적으로 변동)	7개소
	예술의 전당	월 2회	1개소
	작은 관람회 (한국농아인협회 강원도협회 주관)	롯데시네마 동해, CGV강릉, 메가박스 속초, 프리미어스 춘천	4개소

<표 4>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현황²⁸⁾

구분	상영관수	상영편수	관람객수	비고
2013년	29개관	14편	22,040명	
2012년	26개관	13편	11,707명	
2011년	26개관	7편	6,138명	
2010년	22개관	8편	3,785명	
2009년	18개관	9편	2,330명	
2008년	13개관	13편	2,791명	
2007년	9개관	15편	1,432명	
2006년	6개관	10편	938명	
2005년	2개관	10편	602명	

다. 연극

청각장애인은 연극을 관람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또한 말로 연극을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때문에 연극을 보기 위해서는 수화통역사의 통역이 있어야 하고, 연극을 하기 위해서는 수화나 몸짓으로 표현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연극을 수화통역을 통해 관람할 수

27) 한국농아인협회, '배리어프리 영화' 내부자료, 2014

28) 한국농아인협회, '배리어프리 영화' 내부자료, 2014

있는 정기적 서비스는 없다. 간헐적으로 한국농아인협회 전국 시,도협회에서 극단과 연계하여 배우처를 통해 연극표를 구매하고 농아인협회 직원들이 직접 수화통역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민간 주도의 극소수 기회만이 제공되고 있다.

연극을 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전문 극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는 아직 밝혀진바 없으며 다만 농아인 신체극 전문 극단인 대구농아인협회의 ‘극단 농.담²⁹⁾’과 서대문농아복지관의 수화뮤지컬팀이 전부이다.

라. 문화관광해설

우리나라에서는 관광지에서 여행자에게 보다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예술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2011년 4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문화관광해설사가 최초로 법제화되었다. 하지만 법제화 이전부터 이미 각 지자체에서는 문화유산해설사, 문화해설사 등의 이름으로 양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법제화 이후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문화관광해설사가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재 청각장애인 중 문화관광해설사는 전국에 단 5명이며 이는 종로구청에서 양성한 이들이다. 다만 5명과 일정이 맞지 않으면 수화해설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없고 지정한 범위(정동, 경희궁, 창덕궁 등) 내에서만 수화통역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문화관광해설사 우대조건에 ‘수화가능자, 장애인관광안내 가능자’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정에서 수화 교육은 5시간으로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되기에는 한계가 많다. 때문에 청각장애인이 문화관광해설사의 수화통역에 부족함을 느껴도 추가 전문 수화통역사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자체 조달해야 하는 실정이다.

물론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상시 대기하는 수화통역사가 있고, 수화와 자막이 제공되는 관광지 안내 어플로 ‘나만의 문화유산해설사’, ‘내 손안의 불국사’가 있지만 전국 고궁 및 문화유적지 등의 수와 비교할 때 빙산의 일각도 되지 못한다.

대구의 경우 대구향교와 경상감영 등 도심권에 12개소, 파계사와 부인사 등 팔공산권에 11개소, 용연사와 도동서원 등 달성권에 7개소 총 30개소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되어 있지만³⁰⁾ 이중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해설이 가능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29) 극단 농.담 : 20013년 대구에서 창단된 국내 최초 농아인만으로 구성된 신체극(말이 아닌 몸짓으로 연기)단으로 2013년 5월 춘천마임축제 출전, 12월 첫 정기공연을 하고 2014년 5월 부산국제연극제 3위, 12월 2번째 정기공연을 실시한 바 있음

30) 대구광역시문화관광협회 홈페이지(<http://www.daegutrael.or.kr/>)

마. 기타

그 외 미술과 사진은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창작활동에는 큰 무리는 없으나 이를 배우기 위한 학습의 기회, 창작품을 판매 및 전시할 경우, 자신의 기술을 전수하거나 여러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미술과 사진 등이 활동비가 많이 드는 반면 이를 통한 수익창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청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 확보 방안

청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 확보를 위해서는 청각장애인 특히 농인이 수화라는 고유한 언어를 사용하는 소수집단이라는 사실을 우선 인정해야 한다. 음성언어가 불가능한 사람들의 소극적인 대체 수단으로써의 소통방식이 아닌 고유한 특성과 문화를 가진 수화를 하나의 언어로 인정할 때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화적 접근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서 최소한의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공중과 방송부터 수화 비율을 높여야 한다.³¹⁾ 텔레비전은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안방문화의 대표주자이다. 타인과의 소통 없이도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유로이 즐길 수 있는 문화의 대표 텔레비전이야 말로 어떠한 장벽도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90%이상 실시되고 있는 자막과 마찬가지로 수화통역의 비율도 90%이상으로 늘려야 하며 지방방송 또한 예외가 아니다. 더불어 텔레비전을 제작할 때 수화방송 크기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모델로 제작되어야 한다. 수화를 보는 농인은 아나운서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화통역사를 보기 때문에 아나운서의 얼굴이 클 필요가 없고 오히려 수화화면이 커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너무 작은 수화화면으로 인해 눈의 피로도가 높아 오래 시청할 수 없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영화를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한국영화는 문화생활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시대를 공유하고 역사를 공감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시대적 정신의 산물이다. 이에 한국영화를 한국 사람이 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때문에 청각장애인도 청인과 마찬가지로 한국영화를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31) 안영민, 부산국제영화제(PIFF) 장애인 참여환경 조사, 장애인문화권 보장을 위한 방송의 역할, 2008, p.35

이 마련되어야 한다.³²⁾ 이를 위해서 한국영화에 자막을 필수적으로 삽입하는 방법이 있고, 좌석 앞에 자막 영상이 별도로 뜨게 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 관람객의 요청에 의거 특수 안경을 배포, 착용하면 안경을 착용한 사람에게만 자막이 보이는 시스템을 상용화하는 방법 등이 있다. 실질적으로 자막을 볼 수 있는 특수 안경은 미국 등지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장점이 있다. 무엇이든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인식의 문제인 것이다.

셋째, 문화예술 창작인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³³⁾ 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단 설치 지원, 청각장애인의 시립극단 등의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극단 활동 등에 대한 차별 금지와 우선 지원, 창작활동에 필요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 또한 공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과 사진 및 미술인들이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어려움으로 배움과 교류, 판매와 전승의 한계를 느끼지 않게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그 밖에 자신의 언어인 수화로 문화관광해설을 들을 수 있는 농인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과 전국 배치, 각 문화관광지에 있는 스크린 설명에 수화삽입, 말이 아닌 신이 주신 몸짓의 대명사인 농인의 몸짓을 활용한 신체극의 유보고용³⁴⁾화, 글로만 표현되고 있는 문학을 수화영상으로도 제작보급보존, 수화 가수 발굴지원³⁵⁾, 텔레비전이나 연극에 청각장애인 역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이 있다.

무엇보다 청각장애인도 보고 듣고 즐기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 가슴 뜨거운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공감하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정치인은 정책으로, 행정인은 실무로, 영화인은 제작으로, 예술인은 동참으로 함께 해야 한다.

32) 현근석, 부산국제영화제(PIFF) 장애인 참여환경 조사, 영화컨텐츠 모니터링 결과, 2008, p.81

33) 최범식, 문화예술인 지원정책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시각예술인 지원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p.122

34) 특수 직업군은 특수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하게 하는 제도 예) 시각장애인의 안마

35) 스웨덴에 청각장애인 중 수화로 랩을 하는 랩가수가 있음(수화통역사가 랩을 음성통역 함)

VI. 나가며

현대 사회에서 영화를 보는 것은 사치가 아니다. 영화표를 인터넷으로 예매하는 것도 특권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게는 이러한 당연한 삶이 당연하지 않게 펼쳐지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권 또는 이외 다른 국내,외적 기준이 그리하듯이 문화예술활동 창작자로서의 권리와 문화예술활동을 향유하는 자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함해서, 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단계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접근 및 향유권 확보와 함께 청각장애인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창작활동에 참여여하고 즐길 수 있는 사회적 제도 및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